

참고 9.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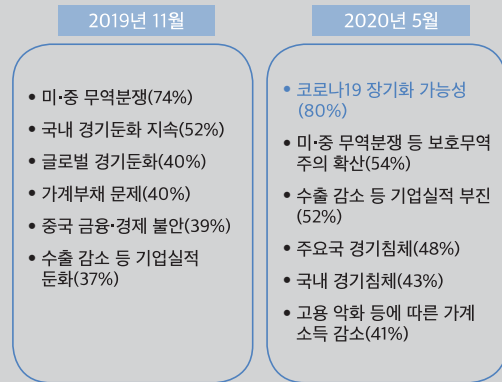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포착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인 하나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¹⁾ 이 하에서는 5월 14~25일 기간 동안 국내외 금융기관 종사자 및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리스크 요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²⁾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 가능성(80%),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54%), 수출 감소 등 기업실적 부진(5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주요국 및 국내 경기침체도 비교적 높은 응답 비중(각각 48%, 43%)을 나타냈다.³⁾

지난 서베이(19년 11월)와 비교하면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새로이 대두되었으며 기업실적 부진과 주요국 경기침체 우려도 증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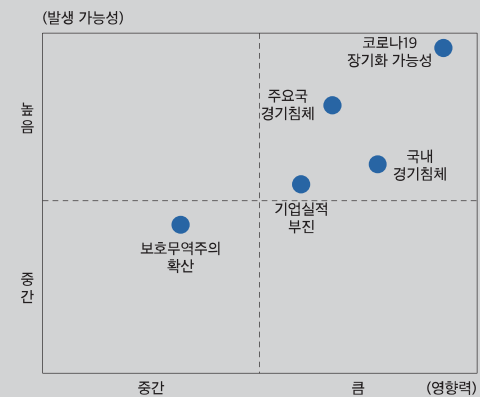
주요 리스크 요인¹⁾의 변동 내용



주: 1)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상위 6개 리스크 요인
자료: 한국은행

주요 리스크 요인 중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 및 국내 경기침체, 기업실적 부진은 발생 가능성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중간 정도의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리스크 요인별 발생 가능성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력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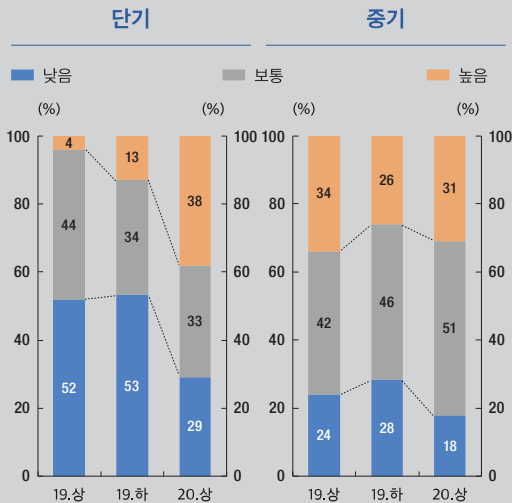
- 1)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약 10개국 중앙은행도 유사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 2) 응답자별로 5개 리스크 요인을 기술하도록 하는 복수 응답 기준으로, 응답 비중 80%는 응답자의 80%가 해당 리스크를 5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언급하였음을 의미한다.
- 3) 5개 리스크 요인을 중요도 순으로 분류하여 파악한 1순위 응답빈도수 기준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60%)이 압도적인 가운데 기업실적 부진, 주요국 경기침체, 국내 경기침체가 각각 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도 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우려, 기업 및 개인의 신용위험 확대 등이 지적되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단기(1년 이내)와 중기(1~3년)에서 모두 상승하였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단기에서 「높다」로 응답한 비중이 38%로 지난 서베이(1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다만 중기의 경우 소폭 증가(26% → 31%)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또는 재유행되더라도 보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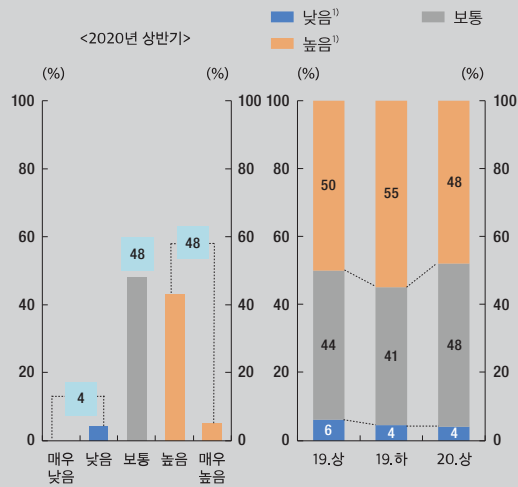


주: 1) 높음과 낮음은 각각 서베이 항목의 매우 높음과 매우 낮음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비중이 96%로 지난 서베이나 동일하였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주: 1) 높음과 낮음은 각각 서베이 항목의 매우 높음과 매우 낮음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높아졌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은 우리나라가 초기 방역뿐 아니라 외환시장 불안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고, 은행 등을 중심으로 안전장치를 잘 구축하고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비대면 금융 소비가 늘어나면서 각종 보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IT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이루어진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및 금융규제 완화 기조가 코로나19 이후 정상 시점으로 복귀하였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